

# SK건설, '카보' 지분 41.67%... 최대 주주로

### 금광 채무 연대보증 MBH 지분 17% 인수 향후 F1대회 운영구조 영향 미칠지 주목

F1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 투자사인 MBH(엠브릿지홀딩스)가 보유지분을 모두 SK건설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MBH 대표가 카보 경영 대표라는 점에서 지분구조 변동이 KAVO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전남도 F1지원본부 등에 따

르면 KAVO는 F1코리아 그랑프리 직후인 지난달 말 MBH가 소유하고 있던 카보 내 지분 17%를 SK건설이 모두 인수했다. SK건설은 MBH가 갖고 있던 카보 내 투자지분율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기존 24.67%인 지분율을 41.67%까지 올려 KAVO의 최대주주가 됐다.

KAVO는 MBH에 투자했던 금광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금광이었던 보종역(337억)에 대한 채무 대책이 어렵게 되자 MBH에 대응방안을 요구했고 MBH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카보 투자사인 SK건설이 이를 연대보증기로 협약해 지분 변동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28.83%), 전남개발공사(15%), 신한은행(6.67%), 농협중앙회(6.67%), 광주은행(1.16%) 등의 지분율은 기존과 같지만 MBH의 지분율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MBH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넘긴 만큼 당분간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인정해주기로 주주사간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MBH의 카보내 영향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외 2년내 MBH의 요구가 있을 경우 MBH가 무상으로 넘긴 주식보유분에 대해 평가작업을 거쳐 이를 보전해주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남도측은 "MBH의 보증채무 부문을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지분

구조를 변경한 것"이라며 "카보 투자사간 내부 지분변동이므로 기존투자사 이탈이나 신규투자 등은 발생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MBH의 카보 내 지분율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주장 건설에 따른 추가 공사비나 대회 운영비에 대한 주주사간 분담 문제를 놓고 MBH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주주로서의 권한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카보, 도의회 요구 자료 오늘 제출 F1 부실 운영 실태 드러날 지 관심

F1(포틀러) 대회운영법인인 KAVO가 전남도의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기로 해 도의회의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7일 "KAVO측에서 의회의 46개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목포지사로 보내 정리한 뒤 18일 오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9일 ▲경주장 설계비 및 부문별 건설비 현황 ▲경주장 시설비 추가계약서 ▲경주장 완공 지연 이유 및 계약서 내역 ▲티켓 발행 및 판매 현황 ▲경주장 광고 계약금액 및 기납금·식당·기업체 입주계약서 사본 ▲경주장 건설 노동자 임금 미지급 내역 ▲외국인 관광객 현황 등 46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17일까지 요청했다.

도의회는 또 ▲KAVO 이사회 회의록 ▲경주장 공사 일정관리 계획 ▲F1 대회 사업계획서 ▲경주장 설계비 및 실제 계약 금액 ▲티켓사 계약서 등의 서류도 요구한 만큼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합람 미달'로 평가받는 F1 대회 운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도의회가 이들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이상 도민들의 열세가 투입 사업을 놓고 도의회가 '지나친 정보공개'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또 "KAVO 정영조 대표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삼성, MBC 정보유출 연루 직원 면직

삼성그룹은 17일 MBC 사내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삼성경제연구소 소속 오모 부장에 대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면직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MBC 사내정보 유출 사건에 삼성 직원이 연루된 것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 결과 MBC 출신인 오 부장이 개인적으로 얻은 MBC 내부정보를 외부의 지인과 일부 회사 임직원에

에게 단체 메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이는 오 부장의 개인적 판단에서 이뤄졌고, 대부분 수신자는 수동적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삼성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보전달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면직 조치된 오 부장 외에 이베 일을 전달받은 내부 임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가보존묘역 관리 지원하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영숙 전 총리 등 노무현재단, 봉하재단 관계자 등이 17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최근 발생한 묘역 훼손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영숙 전 총리 등 노무현재단, 봉하재단 관계자 등이 17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최근 발생한 묘역 훼손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제공=연합뉴스

## 민주 486 ‘하청정치’ 청산할까

### ‘진보행동’ 발족 독자 세력화 나서

민주당 ‘486(4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정치인들이 17일 ‘새로운 진보’를 기치로 내걸고 독자 세력화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80년대 운동권 출신 전·현직 의원 모임인 ‘진보행동’을 발족했다. 기존 삼수회를 확대 개편한 진보행동에는 이인영 김영춘 최고위원과 조정식 강기정 우상호 임종석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42명이 참여했다. 대표 격인 운영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전 의원은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고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목표로 다음 총선과 대선 현장에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임종석 전 의원은 “확고한 야권 연대를 통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려는 게 국민적 요구”라며 “야권 통합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보와 통합을 조직화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9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정권교체에 입문한 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 체제에 이르기까지 출구권력 실세에 편승한 ‘하청정치’를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또다른 계파정치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1회 노출비리 아웃제’ ‘입장권 정산시스템’ 등 지자체 스스로 내부 비리 차단

### 담양 등 6개 시·군 ‘통제시스템’ 시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막고자 지자체 스스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을 차단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담양군 등 6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지자체는 담양군과 경기도 남양주·파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포항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으로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청렴마일리지제도 및 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활동을 하고 지자체 실정에 따라 특화된 내부통제 수단을 가동한다. 담양군의 경우 비리가 발생되면 즉시 해임 이상 중징계를 하고 고발하는 ‘1회 노출 비리 아웃제’를 시행하고 각종 행사의 입장료

수입 등의 횡령을 막고자 ‘입장권 일일 정산시스템’도 운영한다. 파주시는 금품을 받거나 공금 횡령 등을 한 직원은 바로 퇴출시키는 ‘원(one)아웃제’를 시행한다. 익산시는 인사비리를 막고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인사사전에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부서별 보유계좌 및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가 발생했을 때 부서가 같이 책임지는 연대책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자체에 정부합동감사와 시·도 종합감사 자료 등을 제공하고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우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 비리연루 공무원 감사 단계서 出禁

### 법무부, 개정 출금 규칙 공포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던 비리 공무원의 국외도주 사례가 부쩍 증가했고, 감사원도 이런 실태를 고려해 비리 공무원의 출국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다”고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중기 전 충남 당진군수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수익원내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발되자 여권을 위조해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섯 번째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에 규정돼 있던 출국금지 기간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뒀다. 출국금지 기간은 종전대로 1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기소종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무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사 등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사안별로 세분화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던 비리 공무원의 국외도주 사례가 부쩍 증가했고, 감사원도 이런 실태를 고려해 비리 공무원의 출국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다”고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중기 전 충남 당진군수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수익원내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발되자 여권을 위조해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섯 번째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에 규정돼 있던 출국금지 기간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뒀다. 출국금지 기간은 종전대로 1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기소종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무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사 등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사안별로 세분화했다. /연합뉴스

##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땀뿜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 병후의 체력 저하,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아게·목결림, 수직지림·수축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광고심의필 : 1056-0600